



보 도 자 료

“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
행복한 나라”

- ▶ 보도일시: 2015.2.17.(화) 석간
- <인터넷> 2015.2.17(화) 10:30
- ▶ 총 4쪽(참고 1쪽 포함)

❖ 근로기준정책과 과 장 권창준
사무관 송유나

☎ 044-202-7529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, 제재 강화한다 - 「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」 국무회의 통과 -

□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.17.(화) 국무회의에 보고·의결, 2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.

○ '14년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3천억(전년대비 10% 증가)을 상회하고 체불근로자는 293천명에 달하고 있으나,

- 현재 임금체불시 실제 부과된 벌금액이 체불액의 30% 이하인 건이 약 60%, 벌금액이 체불액의 50%를 초과하는 건은 약 6%에 불과한 실정이다.

* '14년 기준 10%이하 8.0%, 10%~30% 54.3%, 50% 초과 6.4%

※ 임금체불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(근로기준법 제109조)

○ 이에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를 강화, 임금체불을 예방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.

□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① 근로자가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*에 대하여 체불액과 같은 금액의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
* ▲1년동안 임금등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월수가 4개월 이상 ▲미지급 임금등 금액이 4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

- ② 국가, 자치단체,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등에서 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

* 현재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, 신용제재만 가능(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등)

- ③ 현재 퇴직, 사망 근로자에게만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던 것을 재직근로자에게까지 확대

- ④ 서면근로계약 체결 교부의무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→과태료로 부과방식 개선

□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“임금체불은 산업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비정상적인 관행”이라고 하면서

- “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”고 강조하였다.

- 아울러, “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비 및 체당금 지원, 체불사업주 용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, 근로감독 및 행정서비스 강화도 추진하겠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송유나사무관(☎ 044-202-752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 고

체불임금 관련 통계자료

□ 연도별 체불임금 발생 현황

(단위 : 천명, 억원)

구 분	'04	'05	'06	'07	'08	'09	'10	'11	'12	'13	'14
근로자수	301	292	277	194	249	301	276	279	285	267	293
금 액	10,426	10,291	10,297	8,403	9,560	13,438	11,630	10,874	11,772	11,930	13,195

□ 임금체불 신고 및 처리 현황

○ 사건 접수 및 처리

(단위 : 개소, 건, 명, 백만원)

연 월	구 분	신 고			처 리			처리종
		계	신 규	이 월	총 계	지도해결	사법처리	
'14 년	사업장수	119,760	117,434	3,773	117,531	93,523	29,387	3,630
	건 수	195,783	189,671	6,112	190,077	131,052	59,025	5,706
	근로자수	292,558	283,925	8,633	283,824	176,209	107,615	8,734
	체불금액	1,319,479	1,265,770	53,709	1,271,616	645,205	626,411	47,863
'13 년	사업장수	108,034	105,164	4,437	105,736	80,943	29,944	3,795
	건 수	181,180	173,855	7,325	175,039	114,064	60,975	6,141
	근로자수	266,506	255,201	11,305	257,840	157,644	100,196	8,666
	체불금액	1,192,979	1,128,455	64,523	1,139,099	556,451	582,647	53,880

※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 중 체불액이 확정된 사건을 기준으로 집계

○ 금품종류별 업종별 규모별 체불임금내역('14년말, 체불액 기준, 단위:억원)

금 품	임금	퇴직금	기타금품	1인당 체불액
	7,403(56.1%)	5,189(39.3%)	603(4.6%)	451만원
주요업종	제조업	건설업	도소매및음식숙박	사업서비스업
	4,047(30.7%)	3,031(23.0%)	1,603(12.1%)	1,422(10.8%)
규 모	5인 미만	5~30인 미만	30~100인 미만	100인 이상
	3,129(23.7%)	5,897(44.7%)	2,278(17.3%)	1,891(14.3%)